내년부터 유치원~고교 장애학생 의무교육

준비 부족 '파행' 우려

특수학급 설치 광주 30·전남 24%

중·고 특수학급은 이미 정원 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만 5세 이상의 유치원 및 고교 장애인 학생의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광주지역 전체 529개 유치원·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157곳(29.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35곳 중 6곳, 초등학교 145곳 중 102곳, 중학교 84곳 중 32곳, 고교 65곳 중 17곳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4.55명(정원 6명), 중학교 6.08명(6명), 고교 8.11명(7명)으로 중·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전남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유치원 584곳 중 15곳, 초등학교 437곳 중 224곳, 중학교 247곳 중 74곳, 고등학교 154곳 중 33곳으로, 전체 학교 대비 24.3%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의 경우 지금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당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면서 각 학교가 일반 학급에서도 장애학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게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애인 학급 탈법" 행정심판 청구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지키지 않는 일선 학교들의 '탈법 운영'을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르면 이달 말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명이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취지의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과정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학부모들의 판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불법 수집 증거로 혐의 입증해도 무죄"

광주지법, 억대 사기 피고인 2명 무죄 선고

영장없이 불법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억대 사기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0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해 다른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신도 고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이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김모(여·34)씨와 또 다른 김모(44)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없이 현장에 있던 성금 모금장부를 압수했다"며 "따라서 이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부에 기록된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위법한 증거인 장부를 기초로 얻어진 2차적 증거지만, 피해자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험을 진술한 만큼 장부와 연관성이 희석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미리하는 성묘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20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시립묘지에서 한 성묘객이 미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도심 슈퍼서 '인질극'

광주 지산동서 50대男, 여주인 흉기 위협

경찰과 30분 대치 … '업무방해' 싸고 앙심

광주 도심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만에 진압됐다.

지난 1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N슈퍼마켓에서 강모(56)씨가 여주인 박모(5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강씨는 "기자들을 불러달라. 할말이 있다"며 30여분간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은 강씨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편의점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자충격기로 강씨를 제압했으며, 박씨는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5월 여주인 박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강씨는 박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강씨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정보공개 의무 없다"

광주지법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소송 각하

(재)광주비엔날레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모 시민단체 이모씨가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비엔날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일 뿐"이라며 "이 소송은 적절하지 않은 상대를 대상으로 낸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비엔날레재단에 2006~2007년 예·결산서와 고시·공고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씨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기관인데, 만일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수법인을 설립해 정보공개 의무를 피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병역비리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병역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병역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사건에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유명인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환자 바꿔치기'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빼낸 혐의로 브로커와 환자 등을 구속했으며, 일산경찰도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2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초 행렬 산불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남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20일 오전 11시50분께 나주시 다도면 궁원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임야 0.3ha를 태우고 1시간40분만에 꺼졌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 여수시 소라면 야산 중턱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임야 0.1ha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종행기자 golee@

초등생 납치범 알고보니 외삼촌

씽나팔

○…초등학생이 외삼촌에게 납치됐다 8시간 만에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20일 서울양천경찰에 따르면 이모(31)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학교에서 귀가하던 조카 홍모(8)군을 흰색 승용차에 태워 유괴한 후 홍군의 부모에게 7천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경찰은 홍군 친구들로부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홍군의 외삼촌인 이씨의 범행인 것으로 추정해 홍씨 부부에게 이씨를 계속 설득하도록 했고, 이씨는 오후 8시30분께 홍군을 집 앞에 내려주고 도주.

○…경찰은 "신용불량자인 이씨가 누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연합뉴스